

01.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 ② 블랙버그선언과 행정재정립운동을 계승·발전시킨 이론이다.
- ③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 ④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행정 일원론적 입장에 가깝다.

②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사회 격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1985년 블랙버그선언과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은 이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 ① [○] 신행정론은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미국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행태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 ③ [○] 고전기 능률지상주의를 탈피하여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실성(현실적합성)과 형평성 등 가치를 중시한 가치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 ④ [○] 행정의 가치판단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 관점이다.

📌 신행정론의 주요 특징

- ①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 가치주의, 인본주의 행정학
- ②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 중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강조
- ③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새일원론
- ④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⑤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⑥ 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대응성 강조
- ⑦ 후기관료제모형 –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 주장
- ⑧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모형 강조 – 수익자의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02.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치지 않고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②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 ③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①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의 순으로 의제가 채택된다. 사회문제가 민간주도에 의하여 이슈화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② [O] 동원모형은 사회문제 → 공식의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의 순으로 의제가 채택된다.

③ [O] 내부접근형은 특정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거나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정부내부자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모형이다.

④ [O] 공고화(굳히기)모형은 대중적 지지가 높고 정부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모형이다.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음모형)
형성방향	외부 → 내부(① → ② → ③ → ④) ¹⁾	내부 → 외부(① → ④ → ② → ③)	내부 → 내부(① → ④)
주도	문제당사자, 강요된 문제	정책담당자(PR 이용), 채택된 문제	정책담당자(이슈화 및 체제의제 단계 없음)
사회	평등사회(선진 다원사회)	계층사회(권위주의 사회)	불평등사회(부와 권력이 편중된 사회)
용이성	의제채택 가장 곤란, 민주적	의제 채택 비교적 용이	의제 채택 가장 용이, 비민주적

1) ① 사회문제 → ② 이슈화 → ③ 체제의제 → ④ 제도의제 

주도자 / 대중지지	높음	낮음
사회적 행위자들	① 외부주도형	③ 내부접근형
국가(정부)	② 굳히기형(공고화형)	④ 동원형

① 외부주도형 : 매스미디어나 정치적 과정 등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

② 굳히기형(공고화형) : 정부가 쉽게 주도하여 결정하고 집행

③ 내부접근형 : 영향력 있는 관심집단의 역할 중요

④ 동원형 : 정부주도의 공공관계 캠페인(PR) 중요

03. 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 분업 등 조직의 공식구조를 중시하고, 조직활동의 합리적 계획을 강조한다.
 - ②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가정하며, 동기부여를 위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한다.
 - ③ 조직현상에 내재하는 보편적 법칙성을 발견하고, 조직관리 원리를 생산하는 데 주력한다.
 - ④ 조직참여자의 만족도, 즉 사회적 능력을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제시한다.
- ④ 경제적 보상이나 기계적 능력을 중시하는 고전적 조직론과 달리 신고전적 조직론은 조직참여자의 만족도나 비경제적 보상, 즉 사회적 능력을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제시한다.

①②③ [×] 모두 고전적 조직론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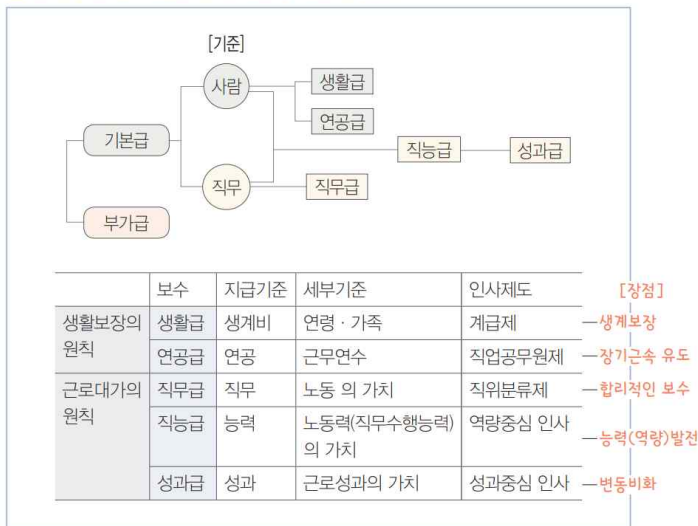
📌 조직이론의 변천(D.Waldo)

구분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
해당이론	과학적 관리론 등	인간관계론 · 행태론	체제론 이후
인간관	합리적 · 경제인간	사회적 인간	복잡한 인간
가치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다원적 목표 · 가치 · 이념
연구대상	공식적 구조	비공식적 구조	동태적 · 유기적 구조
주요변수	구조	인간	환경
환경관	폐쇄적(조직 · 환경)	대체로 폐쇄적	개방적(조직 · 환경)
연구방법	원리접근(형식적 과학성)	경험적 접근(경험적 과학성)	복합적 접근(경험과학, 관련과학 등)

04.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②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숙인적 기본급이다.
 - ③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이다.
 - ④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일반적이다.
- ④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아니라 생활급이 주로 사용된다. 계급제는 직무중심의 공직분류가 아니라 사람중심의 공직분류제이므로 공무원 개인의 연령이나 가족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① [○] 직능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 연공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 실적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보수구조 및 개별보수체계(보수제도의 종류)



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발전된 개념이다.

- ① 평등성 ② 형평성 ③ 민주성 ④ 능률성

② 약자에 대한 배려와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의 기반이 되는 이념은 형평성(Equity)이다. 사회계약론 → 정의의 원리 → 형평성 순으로 영향을 마쳤다.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라는 수평적 공평과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이 포함된 개념이다. ①의 평등성(Equality)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수직적 공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형평성-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 다실직자

	수평적 공평 ¹⁾	수직적 공평
개념	같은 것은 같게(일률적 평등)	다른 것은 다르게(정당한 불평등)
성격	인간의 존엄, 기본적 욕구 강조	능력의 차이 강조
예	공개경쟁채용, 비례세	할당임용제, 누진세 ²⁾ , 공채 발행
이념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론	욕구이론	실적이론

1) 수평적 공평에 의하여 기회의 공평을 보장해 주어도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2) 누진세와 임용할당제의 경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이지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니다.

06. 정책집행이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 ② 하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 ③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④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정치·행정이원론적 접근법은 하향적 접근법, 반대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지 않는 정치·행정일원론적 접근법은 상향적 접근법에 각각 해당한다.
- ① [X]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에 담긴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 ② [X]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들의 행태와 능력에 주목한다.
 - ③ [X]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하고 명확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강조한다.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

구분	유형	하향적 · 집권적 집행 (top-down)	상향적 · 분권적 집행 (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 · 구조적	유동적 · 동태적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집행재량		재량 불인정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	환경에의 적응성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자의 재량권
핵심적 법률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거시적 · 하향적) 집행	적응적(미시적 · 상향적) 집행
Elmore		전향적 집행	후향적 집행
방향과 흐름		집권적, 기계적, 단계적(선형적), 연역적, 규범적, 기술적 ↳ technical	분권적, 역동적, 비단계적(융합적 · 가역적), 귀납적, 실증적, 기술적 ↳ descriptive

07.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봉사자로서 부하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 스스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②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의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통해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 헌신을 이끌어낸다.
- ③ 수퍼 리더십은 구성원 모두 스스로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능력을 발휘한다.
- ④ 변혁적 리더십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함으로써 부하들의 의식수준과 동기수준을 끌어올린다.

④ Burns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① [X]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리더십이다.

② [X]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③ [X] 셀프 리더십은 구성원 모두가 자기방향성과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을 말 하고, 구성원 모두가 셀프리더가 되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리더십은 수퍼리더십에 해당한다.

리더십의 유형

행태론의 유형	권위형	임무중심의 지시·명령형	
	민주형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부하(인간관계)중심형	
	방임형	구성원의 자유행동에 의존(리더로서의 의미X)	
거래형과 변혁적 리더십	거래형	성과(노력)와 보상간 거래와 교환 중시(조건 보상과 예외 관리)	
	변혁적 리더십	안전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며 영감적 동기부여, 카리스마적 리더십,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등 중시	
기타 현대적 리더십	카리스 마적	리더의 특출한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헌신과 일체감을 유도하는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개념 (중첩)
	영감적	미래에 대한 구상(비전) 공유	
	서번트 리더십	변동에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종복(하인)정신(servantship)이 핵심. 부하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의 봉사정신 강조가 변혁적 리더십과의 차이	
	분배된	단일의 지도자가 아닌 여러 사람에게 분배된 공유된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
	촉매적 리더십	연관성 높은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촉매역할을 하는 리더십 ⇨ 정부부문에 요구되는 리더십	
	진실한 리더십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으로 리더의 솔직·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이 핵심	
	윤리적 리더십	리더가 윤리성에 바탕을 두고 부하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 주는 리더십	
	셀프 리더십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	
	수퍼 리더십	구성원들이 셀프리더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리더십	

08.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②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근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③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피평정자를 잘 모를 때 흔히 발생한다.
- ④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③ 전단은 관대화효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나, 피평정자를 잘 모를 때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관대화가 아니라 집중화효과이다.

① [○] 후광효과 또는 연쇄효과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② [○]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최초효과이고 최근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최근효과(막바지효과)에 해당한다.

④ [○] 집중화경향은 무난하게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평정하는 현상이다.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착오	개념	방지법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예: 성실하면 청렴·창의적이다)	강제선택법, 요소별평가 등 ↳ 피평정자별 X
시간적 오차 ← 평정시점에 따른 오류	① 근접오류: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막바지 효과(최근오류) ② 최초오류: 첫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첫 머리 효과(초두 효과)	독립평가센터, MBO, 중요사건 기록법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피평정자를 잘 모를 때 발생)	강제배분법 등
관대화의 오차 ← 일관적 착오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배분식이 효과적 → 일정하게	강제배분법, 결과의 비공개
규칙적 오차	언제나(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강제배분법
총계적 오차	평정기준이 일정치 않아 발생하는 불규칙적 오류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예: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	
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예: 특정 대학 출신이 능력이 우수하다)	신상정보 비공개
선택적 지각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방어적 지각	자신의 습성·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 회피	
이기적 착오 (자존적 편견)	자신의 성공은 개인적 요인을, 실패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	
근본적 귀속의 착오	타인의 성공은 상황적 요인을, 실패는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대비오차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하여 평정하는 오류	
유사오차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부하에게 후하게 평정	

09.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 (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e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 ② 뉴거번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강조한다.
- ① [X]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모형을 제시하며 공공가치 창출을 강조한 학자는 보즈만(Bozeman)이 아니라 무어(Moore)이다. 보즈만은 공공가치실패론을 주장하였다.
- ② [X]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뉴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에 해당한다.
- ③ [X]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뉴거버넌스론에 해당한다.

 공공가치관리론의 핵심 내용

공공가치실패론 (B.Bozeman, 2002, 2007)	① 협의(2002) :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제공하지못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② 광의(2007) :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현상 ③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으로 공공가치지도그리기(PVM)모형 제시
공공가치창출론 (Moore, 1995)	①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관리자들이 공공 자산(정부조직,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적극 창출·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② 공공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정당성 및 지지, 운영역량, 공공가치) 모형과 순공공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가치 회계모형 제시

10.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제시한다.
- ② 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엘리슨모형 중 관료정치모형(Model 3)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 ④ 엘리슨(Allison) 모형 중 관료정치모형(Model 3)이 아니라 조직과정모형(모형2)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표준화(SOP)를 강조하는 회사모형과 궤를 같이한다.

- ① [O]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흐름모형(흐름창모형)의 3가지 구성요소(흐름)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 ② [O]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혼합주사모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O] 합리성을 중시하는 최적모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쓰레기통모형과 Kindon의 흐름창 모형의 의사결정 요소

쓰레기통모형	Kindon의 흐름창모형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문제, 정책, 정치

11. 2025.10.2.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④ 지식재산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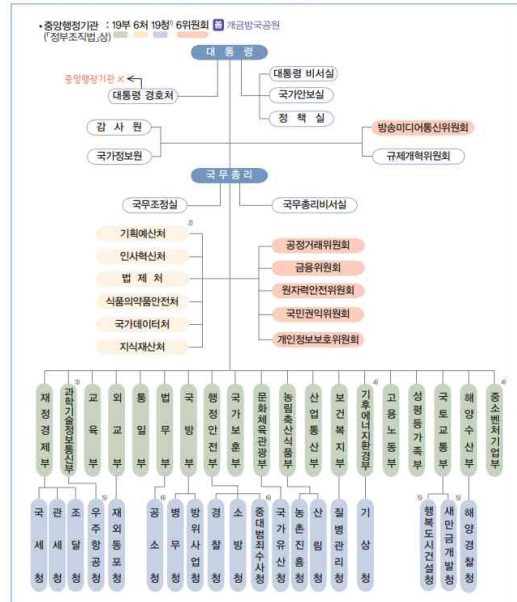
② 특허청이 2025.10.2.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되었다.

①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제2조)으로 정한다.

③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로 지명되어있다. 2025.10.2.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④ [○]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은 지식재산처가 유일하다. 다만, 지식재산처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책임운영기관설치법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

☞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2026.10.2. 기준)



- 1)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개편으로 19청이 됨(2025.10.1. 공포, 2026.10.2. 시행).
- 2)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됨(2026.12. 시행).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처(차관급)와 달리 국무위원임.
- 3)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시행)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가 신설되고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겸)가 폐지됨.
- 4)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6 국문중기복제과외-복수
-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우주항공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전통적(이론상) 개념(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과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종래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았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20.6.9.)으로 국민권익위 등 6개 위원회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3청과 6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 6)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으로 검찰청이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소속)으로 분리·개편됨(2026.10.2. 시행).

☞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¹⁾

- 19부 3처 20청 6위원회 7복수차관 → 19부 6처 19청 6위원회 8복수차관
- ①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²⁾
 - ② 검찰청 →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소속)으로 분리·개편³⁾
 - ③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 및 제2차관 신설
 - ④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
 - ⑤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 신설 및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 폐지
 - ⑥ 특허청 →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
 - ⑦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확대·개편
 - ⑧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 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 신설
 - ⑩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제2차관 폐지)
 - ⑪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경찰의 독립성 강화⁴⁾

- 1) 시행시기: 2025.10.1. 공포·시행(기획재정부 및 검찰청 분리·개편 제외)
- 2)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2026.12. 시행
- 3) 검찰청 분리·개편: 공포 후 1년 뒤(2026.10.2) 시행
- 4)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2025.8.26. 시행

12.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 ② 백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 말을 한다.
- ③ 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 ④ 개인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③ 거래형 부패가 아니라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① [O] 인허가업무 처리 시 급행료를 당연히 받는 관례는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② [O] 악의가 없는 백색부패에 해당한다.

④ [O]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부패에 해당한다.

부패의 유형

거래형 부패	뇌물을 받고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상대가 있는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상대가 없는 내부부패)
일탈형 부패	돈받고 단속 눈감아 주기(우발적 부패)
제도화된 부패	급행료나 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부패(문화화 · 관행화된 체제적 부패)
개인적 부패	단독부패
조직적 부패	공모에 의한 부패
권력형 부패	정치인이나 상층부 관료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료(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작은 부패(tiny corruption)
백색부패	선의를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예: 외환 위기는 오지 않는다.)
회색부패	사회에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패)
흑색부패	악의가 있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법률에 규정하여 처벌 가능한 부패)

13.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ㅁ. 국가의 정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② ㄱ, ㄹ은 맞고 ㄴ, ㄷ, ㅁ은 틀리다.

ㄱ [○]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재개할 수 없다.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2022. 1.).

ㄴ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주민소환법」 제7조).

ㄷ [×]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하면 예산편성·의결 및 집행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 제39조).

ㅁ [X] 국가의 권한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지만, 주요 국가시설의 설치 등 국가의 정책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14.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정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5년으로 설정되어있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출시 후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법정화하고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한다.

- ① [X]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며, 자문위우너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이다.
- ③ [X] 포지티브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규제에 해당한다. 네거티브규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형식이다.
- ④ [X]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기술 및 신제품 출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제품 출시 전에 기존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하여주는 제도이다.

🔗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 ①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
- ② 규제최소주의 :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제 등은 곤란하며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③ 규제일몰제도 : 규제존속기한(원칙적으로 5년 이내)을 설정하여 규제목적 달성 후에는 규제의 폐지를 강제.
- ④ 규제 사전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 신설 또는 강화.
- ⑤ 규제영향분석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가져올 각종 영향(비용·편익 등)을 사전에 파악.
- ⑥ 규제등록제도 :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규제샌드박스**
- ⑦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 신기술 활동 서비스 규제시 네거티브 규제, 제품출시 후 규제 등 우선 고려
- ⑧ 규제유예제도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유예
- ⑨ 신사업규제정비기본계획 : 3년마다 규제개혁위가 수립
- ⑩ 규제개혁위 설치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25인으로 구성, 대통령 소속(사무지원은 총리실 규제조정관)
- ⑪ 행정부에만 적용 : 의원입법 등 적용 X

15.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 ② 프로그램논리모형은 장단기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선별적으로 보여준다면, 목표모형은 정책목표의 달성도와 함께 정책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 ③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 ④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② 반대이다. 목표모형은 장단기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선별적으로 보여준다면, 프로그램논리모형은 정책목표의 달성도와 함께 정책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 ① [○] 정책집행 후에 이루어지는 총괄평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 정책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과정평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 형성평가의 일종인 집행모니터링(사업점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정책평가 유형

유형	개념
평가성 사정	총괄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성(가능성과 소망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공급과 수요가 올바르게 합치되도록 유도하는 예비평가
협회의 형성 평가(집행과정 평가)	프로그램이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시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평가(집행분석)
협회의 과정 평가	정책효과발생의 인과경로를 평가하여 잘못된 인과관계를 시정하고 총괄평가를 보완해주는 평가
사전분석(착수 직전 분석)	프로그램의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에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예비평가
협회의 총괄평 가(효과평가)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간의 인과관계 추정(가장 일반적 평가)
메타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메타분석(평가 종합)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들을 재분석·종합

📌 정책평가의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목표모형

	논리모형	목표모형
개념	프로그램의 논리적 인과경로 설정	정책목표의 달성도 평가
특징	형성(과정)평가의 도구	총괄(효과성)평가의 도구
시기	집행도중에 평가	집행완료 후 평가
범위	전체적인 인과경로(어떤 경로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목표달성여부만 선별적으로

16.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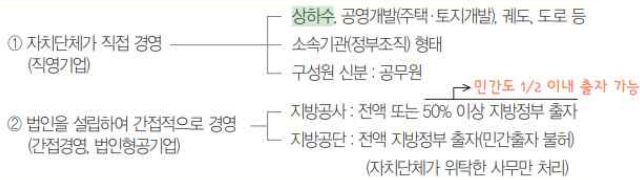
- 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③ 2026.1.2.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감독하지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다.

- ① [O]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 ② [O] 지방직영기업의 사례로 올바른 설명이다(「지방공기업법」 제2조).
- ④ [O] 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1) 종류



(2) 설치 및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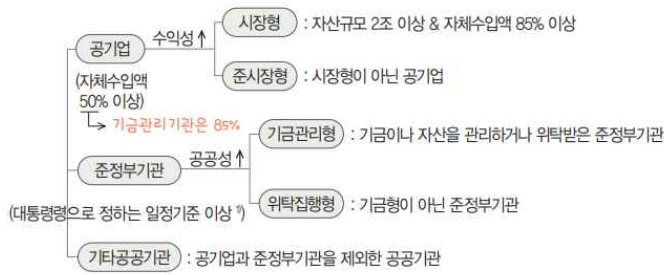
- ① 설치: 자치단체장
- ② 경영실적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실시(필요시 단체장이 할 수 있음)
- ③ 경영진단: 경영성과가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실시

📌 지방공기업의 종류

종류	특징
직영기업(정부기업)	사업본부, 사업단, 상하수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법인형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 등
경영위탁(민간위탁)	아울토싱

📌 공공기관의 유형

■ 공준기-시준-기위



1) 2023.1.1. 부터는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정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고시

정수자-323

17.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 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 ㅁ. 갈등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된다.
- ㅂ. 교류형 성격을 띠지만 직무상 이동은 없다.

-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ㅂ ④ ㄴ, ㄹ, ㅁ

③ ㄱ, ㄹ, ㅁ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의 장점이다.

- ㄱ [X] 직위분류제는 세분화된 분류기준으로 인하여 인사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낮다.
- ㄴ [O] 직위분류제는 사람보다 직무(일)를 중심으로 공직을 객관적으로 분류한다.
- ㄷ [O] 직위분류제가 추구하는 직무급 보수체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ㄹ [X]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개방형 분류구조이므로 신분보장이 약한 편이다.
- ㅁ [X] 반대이다.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갈등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 ㅂ [O] 교류형 성격을 띠지만 직무상 이동은 없다. 따라서 전문성이 유지된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종류, 곤란도 등)	사람(출신, 능력 등)
전문성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
보수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	생활급 · 자격급
융통성	X	O
신분보장	X	O
개방성	개방형	폐쇄형
직업공무원제	X	O
동태적 직무상황	부적합	적합

18.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이다.
 - ②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 ③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경비에 지출된다.
 - ④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이므로 지출하고 남은 돈은 계속 적립해 나간다.
- ④ 국가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기금과 달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용도(이월,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연도도 이입된다.
- ①③ [○] 일반회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경비지출에 충당하는 회계이다.
- ② [○]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달리 특정세입이 특정세출로 연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교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인 재정활동을 위한 회계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용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신축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재원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급부
집행의 자율성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합목적성 차원의 완화된 통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 통일성 원칙 ○	연계 ↳ 통일성 원칙 ✕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20%(금융성기금은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 심의		

19.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 ③ 정책결정자의 경험이나 주장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양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 ④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② [○]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③ [○]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장, 신념, 명분, 담론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1.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모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거친 다음,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이다.
-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단체장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의회가 선출한다.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비교

	일반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설립·해산	법률로 설치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거쳐)	행안부장관승인으로 설치·해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격	○	○
단체장	주민이 직접 선출	구성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자치단체의회가 선출
지방의회	주민이 직접 선출	구성 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
임기	4년	X
주민소환	○	X
조례·규칙	○	○
지방세 징수	○	X
지방채 발행	○	○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조합·협의회	설립 가능	설립 불가